

청렴교육 강사양성 표준강의 2

청탁금지법 의 이해

목차

청탁금지법의 이해



청탁금지법 개요

- 청탁금지법 제정과정 및 의의
- 청탁금지법 추진성과

청탁금지법 구성 및 주요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신고자 보호·보상

참고 청탁금지법 사례를 통한 주요 쟁점

CHAPTER

1

개요

성

처리

보상

결정

청탁금지법 개요

- 청탁금지법 제정과정 및 의의
- 청탁금지법 추진성과

청탁금지법 제정과정 및 의의

2011~2012
다양한
분야·계층
의견 수렴

공개 토론회

대국민 설명회

전문 연구기관
연구

2012~2013
공청회 및
논의과정을
거쳐 법안 보완

정부 입법절차
진행



정부안
국회 제출
2013. 8. 5.

2014~2015
국회 심의 및 법안
공포

정무위원회 의결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국회 본회의
의결
2015. 3. 3.



법안 공포
2015. 3.
27

2016



청탁금지법
시행

2016. 9. 28



청탁금지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지지와 열망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도출된 입법적 산물

청탁금지법 제정과정 및 의의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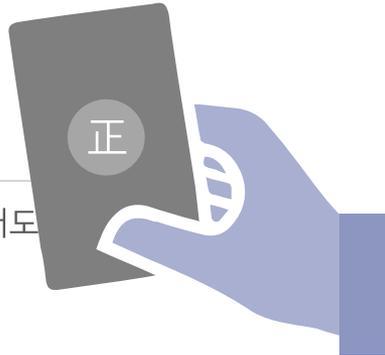
거액의 금품 등을 수수
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공직자 등이
청탁을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 수수시
공직자 이익으로 간주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신고 등 절차 준수시 청탁거절로 간주하고
청탁거절로 발생할 피해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 인지시
신고·반환하면 면책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선의를 공직자·공적업무
종사자등 보호**

청탁금지법 추진성과 1. 사회적 영향



공공시설 운영과정에서의
부정청탁 급감



공직자의
청렴의식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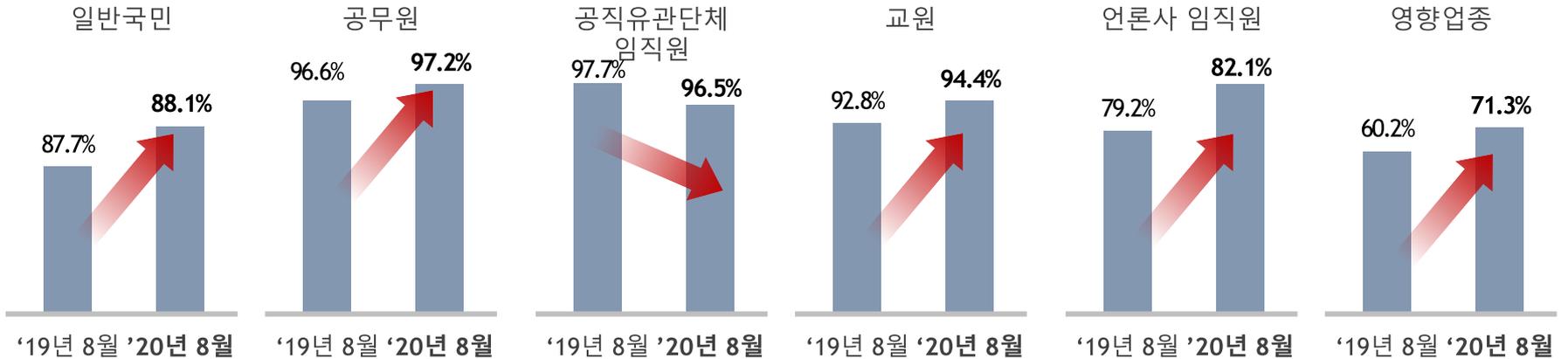


공직자 직무수행의
공정성 향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제공·접대 감소

우리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20.8월, 한국리서치)>

청탁금지법 추진성과 1. 사회적 영향



청탁·접대에 대한 사회
인식·관행의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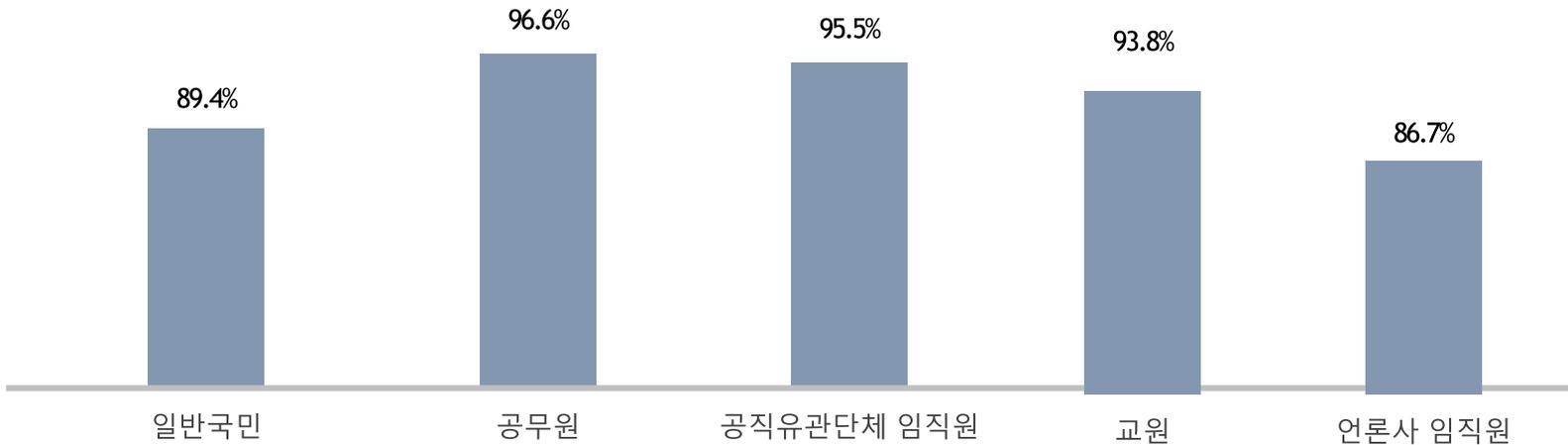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



일상적 소비, 개인
여가활동 증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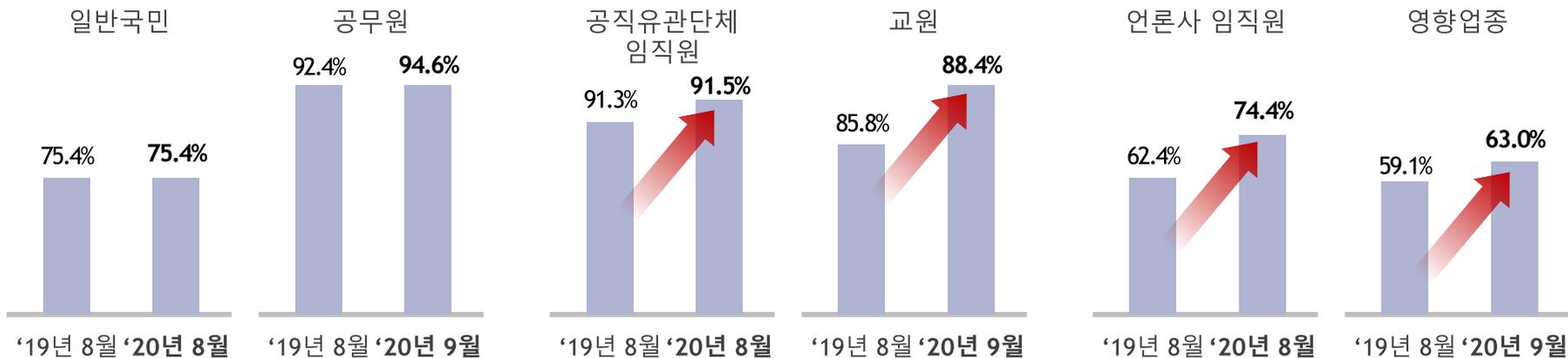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20.8월, 한국리서치)>

청탁금지법 추진성과 2. 공직사회 청렴성 제고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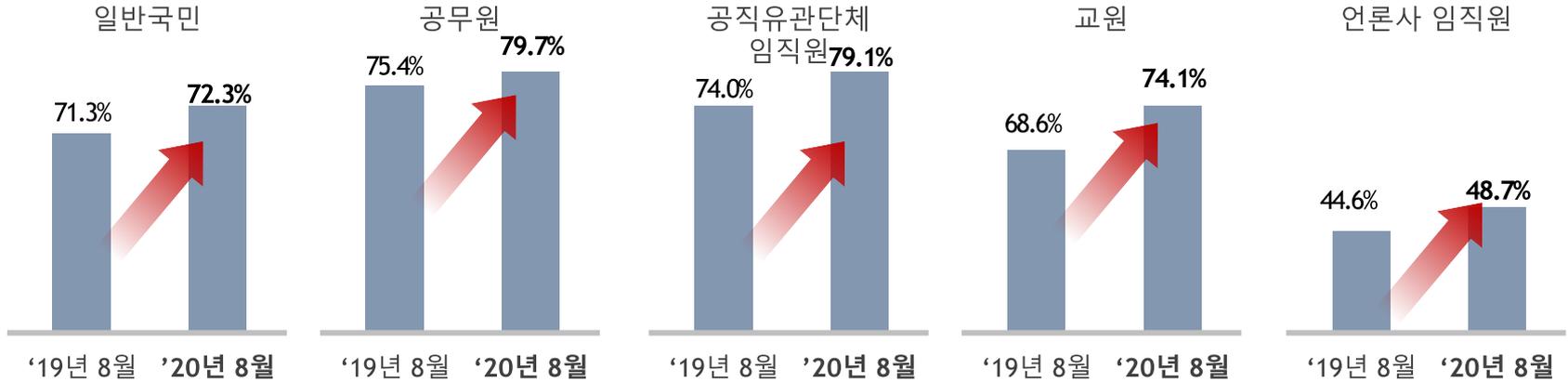
부패문제 개선에 도움이 된다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20.8월, 한국리서치)>

청탁금지법 추진성과 3. 인식도 변화

‘각자내기’가 편해졌다



체감변화 긍정응답 비율

법 시행 이후 체감 정도	일반국민	공무원	공직유관 단체	교원	언론사
인맥을 통한 부탁·요청 감소	-	80.8	85.6	63.1	80.0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선물관행 감소	-	92.9	93.5	82.6	90.9
직무관련자와의 식사, 선물, 경조사비 금액 감소	-	85.9	88.1	82.6	85.9
공직자 등의 업무수행 공정성 향상	56.9	87.3	79.1	53.3	77.2

청탁금지법 추진성과 4. 시행 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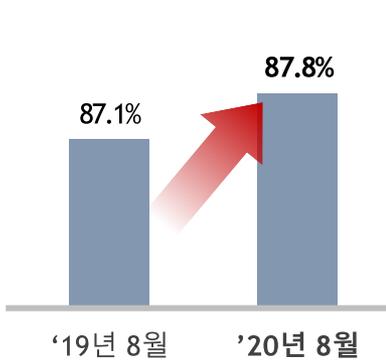
기업의 접대비
지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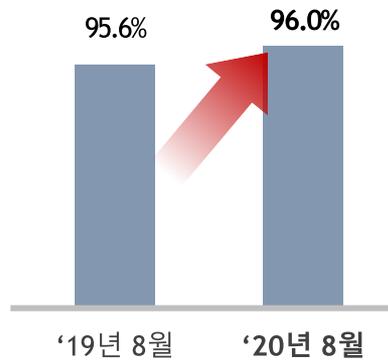
기업 경영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

청탁금지법 시행 지지

일반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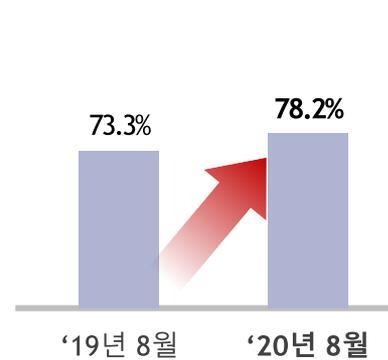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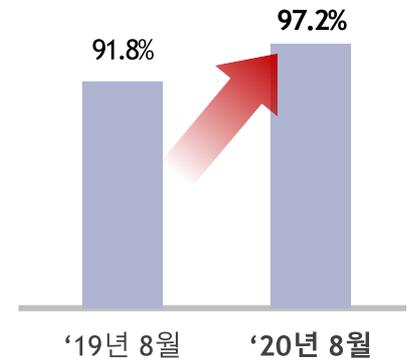


청탁금지법 우리사회 정착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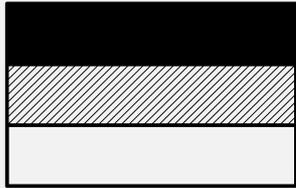
일반국민



공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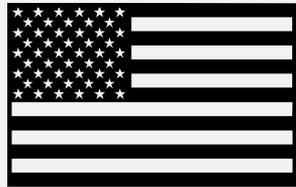


청탁금지법 추진성과 **외국의 평가**



한국의 **청탁금지법 시행은 중요한 제도적 발전**

독일 베텔스만 재단 SGI(지속가능거버넌스지수) 결과 발표('17.9월)



청탁금지법을 공격적으로 시행한 한국은 **국제사회 반부패 운동의 리더**

해외부패방지법(FCPA)전문매체 The FCPA Blog
미국 앤드루 스폴딩 교수 기고('18.2.16)



한국 정부는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방지를 위해 많은 노력**

홍콩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
아시아부패지수 결과 논평('17.3.29)

청탁금지법 추진성과 우리 사회의 변화

NEWSIS

2017년 09월 16일 (월)
부산/울산/경남

부산 학부모 98.4% '학교 현장 침범해졌다'

【부산=뉴스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지역 초·중·고교생 자녀를 둔 학부모 중 98.4%가 학교 현장이 침범해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야 교육정책 모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함께 만드는 청
학부모들의 자
모 2124명이 참

실문 결과에 따
해서는 응답자

大田日報

2017년 10월 25일 (수)
경제 08면

기업 74% "청탁금지법 시행후 기업하기 좋아져"

대한상의 기업 300곳 조사 한 기업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강화 등 내부 업무부담 증가 전체의 74.4%가 '법 시행 후 기업 (27.5%)와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 을 경험하기 좋아졌다'고 밝혔다. 로 업무 차질'(25.9%), '절대·선 기업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

가 줄어드는
어졌다고 등
났다.
공무원의 경
감하지만
하는 것으로
회의소가
대상으로
탁금지법 시

연합뉴스

2017년 09월 25일 (월)
사회

시행 1년 '청탁금지법' 공감 높아져... "공무원 95% 찬성"

시행 1년 '청탁금지법' 공감 높아져... "공무원 95% 찬성"음식점 등 관련 업종 찬성 61.2%...한국행정연구원 '법시행 1년' 인식조사 결과



이데일리

2017년 09월 25일 (월)
정치

국민 89.2%, '김영란법' 찬성한다..전년비 3.9%p↑

[이데일리 김명환 기자] '부경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민 대다수가 이른바 '김영란법'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25일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청탁금지법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일반 국민의 89.2%가 법 시행에 '대체로'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조사 때보다 3.9%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찬성의 비율이 더 높았다. 전년 대비 공무원은 7.9%포인트, 유관단체는 2.0%포인트 각각 찬성률 오르면서 95.0%의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교육계 종사자 역시 지난해보다 2.7%포인트 오른 88.2%를 기록했다.

청탁금지법 추진성과 우리 사회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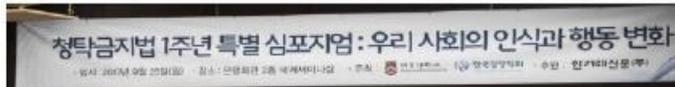
한겨레

2017년 09월 25일 (월)
종합

상장사 777곳 법시행 뒤 적대비 7% 감소

[한겨레] 한양대 정석운·최성진 교수 연구결과 발표

서강대 주최 청탁금지법 1주년 심포지엄



한겨레

2017년 09월 26일 (화)
종합 08면

김영란법 1년...“청탁 거절하기 쉬워졌어요”

‘의리보다 정의’ 뿌리내릴 계기
국민 10명 중 9명 “법시행 효과”

“김영란법 때문이에요”

고등학교 교사 유아부(31)씨가 지난해 10월 이래 자주 입에 올리는 말이다. 선물을 들고 자신을 찾는 학부모에게 이 한마디만 하면 서로 무

는 “학부모 부담이 없
: 인강하면
었다.
지난해 9월
: 청탁 및
: 이른바 ‘청
탁’의 구분
: 은 정의 표
했다고 여



光州日報

2017년 09월 25일 (화)
경제 14면

한전 직원 92% “김영란법 청렴성 향상”

설문 등 한 달간 청렴활동

한국전력(사장 조환익)은 청탁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법 시행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9월 한 달 동안 다양한 청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부 활동으로 한전 직원 및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법 시행 후 인식·행동변화를 측정하는 설문조사, 청탁금지법 위반 상황 발생 시 신고서 작성훈련, 법 위반 사례(권익위 제공) 인트라넷 팝업게시 등을 실시 했다. 또한, 청탁금지법 자가 진단시스템 구축 및 전 직원 법 준수 서약 등 다각적인 활동도 계속 추진해오고 있다.

으며, 85.3%가 법 시행 이후 인식 및 행동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반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퍼지페이(Dutch Pay)의 인상화 및 각종 업무 투명성 증대 등 여러 분야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변화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가상의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제시하고 신고서를 작성하는 모의훈련을 통해 위반사항 발생 시 지체없이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청탁금지법 위반사례(권익위 제공)를 매일 한 가지씩 일주일간 팝업으로 게시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스스로 청탁

부산일보

2017년 09월 28일 (목)
사회 05면

학교서 사라지는 촌지 문화

부산 학부모 98% “학교 청렴해져” 입학·졸업·소풍 등 행사도 간소화

부산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A 씨는 체육대회 날 자녀 반 학생들에게 껌버거 세트를 보냈다. 아이들에게만 주기 미안해 담임교사에게는 10만 원 상당의 떡과 꽃을 보냈다. 하지만 그날 바로 교사로부터 돌려받았다. 청탁금지법(이명 김영란법) 위반 행위라는 것이었다. A 씨는 두안했지만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던 A 씨는 몇 달 뒤 법원으로부터 5배 배태료 처분을 받았다. A 씨는 법에 따라 금품

으로 한 ‘청렴 모니터링’ 결과 응답자 중 98.4%가 ‘지난해보다 학교 현장이 청렴해졌다’고 응답했다.

학교의 각종 행사도 간소해졌다. 통상 학부모회에서 준비하던 입학식과 졸업식 화환이 자취를 감췄다. 소풍이나 체험학습 때 학부모가 준비하던 ‘선생님 도시락’도 법 시행 후 사라졌다. 한 교육계 인사는 “교장이 다른 학교로 옮기면 학부모들이 떡을 해 새 학교에 보내는 관행도 없어졌다”고 귀띔했다.

체육대회나 졸업식 때 학급에 ‘간식 받기’도 점차 없어지고 있다. 학부모가 학생에게 간식을 사주는 것은 법 위반은 아니지만, 학교 측이 뒷



CHAPTER

2

부정청탁
금품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구성 및 주요내용

- 부정청탁의 금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적용 대상기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공직자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일반국민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참고. 청탁금지법의 구성

청탁금지법은 5개의 장과 총24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공직자등의 의무
공무원 및 공무수행사인 외에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그리고
언론사 임직원을 제2조에서
'청탁금지법'의 그 적용대상으로
규정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제5조 제1항
제2조 제2호에 정한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청탁행위를 열거하면서 국민의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청탁의 15개 행위유형에
관하여 규정
제5조 제2항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7개
행위유형을 규정
제6조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제7조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제3장 금품 등의수수 금지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와
관련하여 특기할만한 사항을
제8조 제1항에 규정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되지 않는 7개 항목을 정해
위법성조각사유로 규정

제4장 부정 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제12조
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을 담당
제13조
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14조
신고의 처리
제15조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제16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의무 부여
제17조
부당이득의 환수
제18조
비밀누설 금지
제19조
교육과 홍보 등
제20조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
징계
제22조
벌칙
제23조
과태료 부과
제24조
양벌규정

구분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금지내용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 금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금지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300만원)을 넘는 금품의 수수하는 것을 금지	
제제내용	제재 대상	제재의 종류	제재 대상	제재의 종류
	제3자를 통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1회 1백만원(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사람 (제3자를 위하여 부정청탁한 공직자 등)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백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한 사람	수수 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신고 처리절차	최초 부정청탁 : 거절의사 표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가능)	
	동일한 부정청탁 :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에도 신고가능)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사 표시 (반환 곤란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신고 내용에 대한 감사·수사·조사		신고 내용에 대한 감사·수사·조사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소속기관장) 징계, 직무 배제 등 조치, 부정청탁 내용·조치사항 공개(소속기관장)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대상자 관할 법원 통보(소속기관장) 징계, 직무 배제 등 조치	
신고자 보호보상	보호	보상	보호	보상
	불이익조치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비밀·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상금(최대 30억원)·포상금(최대 2억원) 지급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불이익조치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비밀·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상금(최대 30억원)·포상금(최대 2억원) 지급 보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 핵심내용

부정청탁이란?

법령 위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제5조제1항 부정청탁의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한다고 규정

공직자 “등”이란 한 글자에
민간영역까지 포함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적으로 규정

1	2	3	4	5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련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7	8	9	10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11	12	13	14	15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1. 인가·허가 등 업무 처리

인가·허가 등 직무 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인사 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등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 계약 선정·탈락에 개입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보조금·장려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출자 등을 하도록 개입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등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사용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징병검사, 부대 배속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그 결과를 조작 또는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사건의 수사·재판 등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1번~14번 유형에 대한 지위·권한 남용

위 1번부터 14번까지의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예외사유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예외사유 자세히 보기

1.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법령·기준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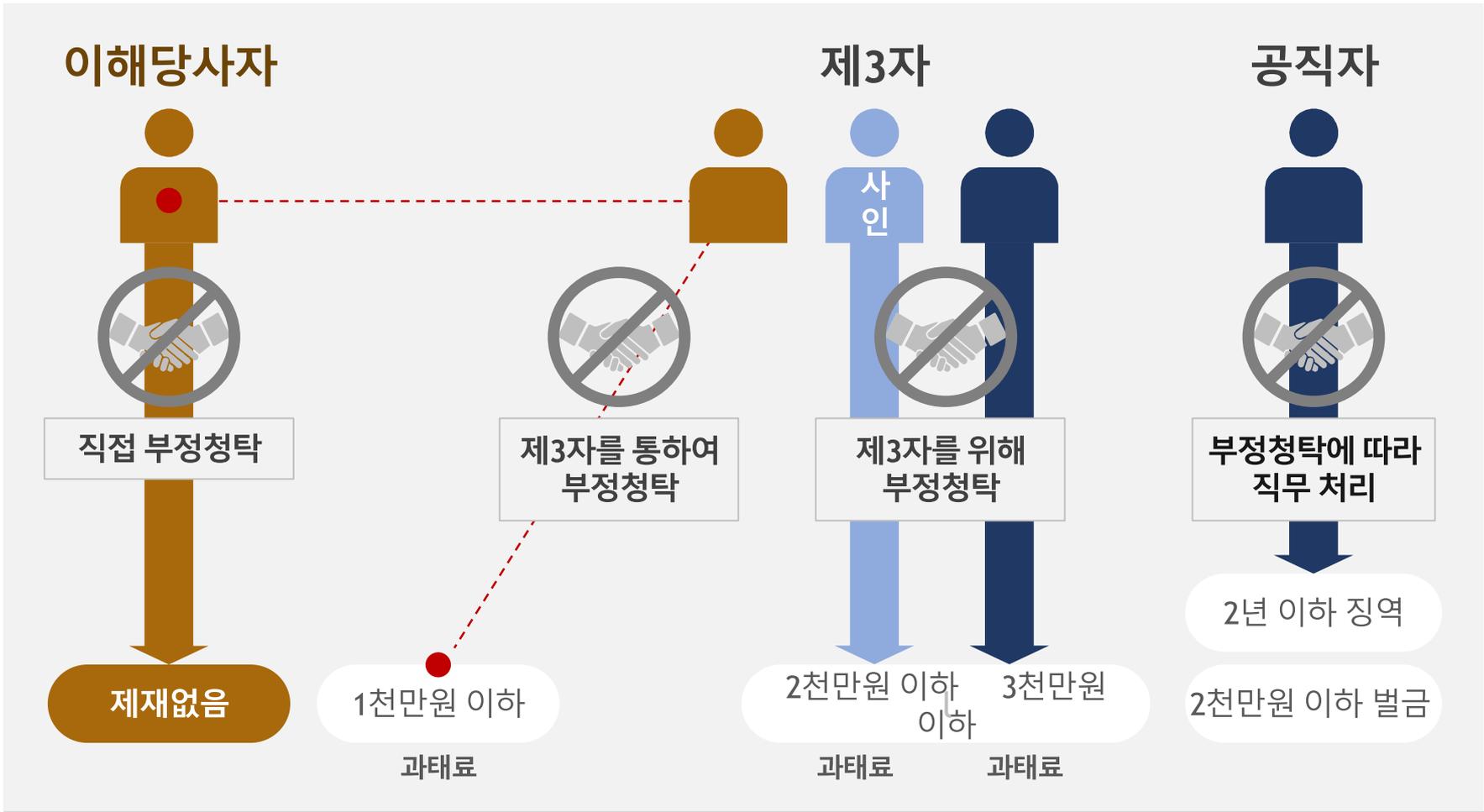
6.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유형과 제재방식



*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 등에게 부탁하거나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나 건전한 의사소통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재대상에서는 제외, 또한 청원이나 민원의 방식으로 청탁하는 경우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절차

공직자등



최초 부정청탁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 신고는 감독·관·조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수사필요성이 인정되면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관리



필요시 소속기관
홈페이지에 공개

조치사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

직무 참여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 직무수행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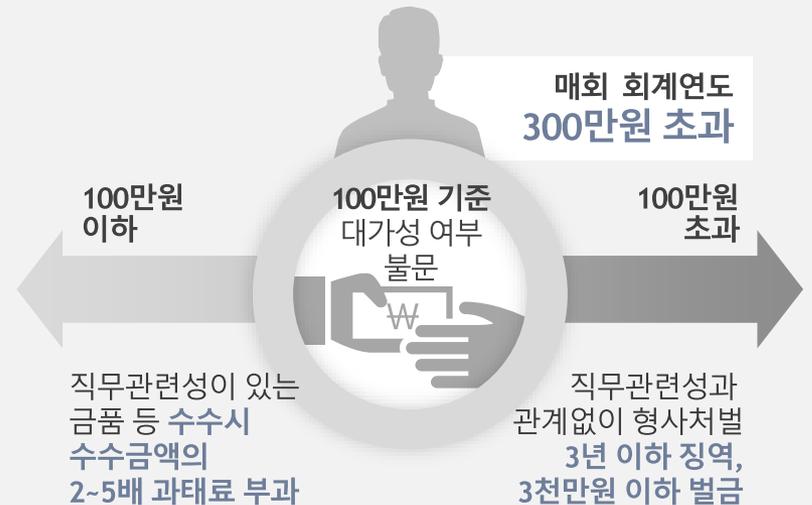
금품 등 수수금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없더라도
그 직위·직책 등에서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됨



직무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

수수행위 금지에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 등도 공직자와
동일한 제재를 받게 되고,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받은 것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처벌

금품등의 수수 금지 수수 금지·허용 금품등

금품등의 종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 편의 제공

채무 면제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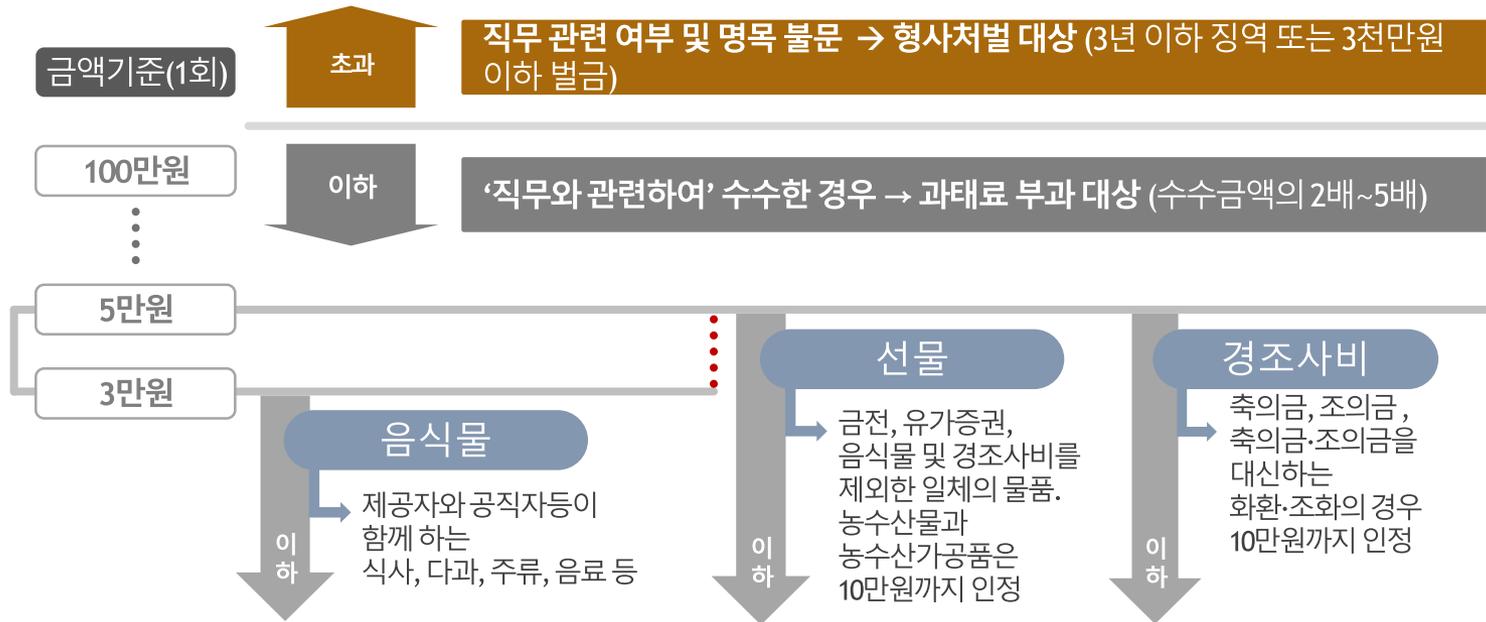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1. 공공기관 또는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등 또는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탁금지법 시행령 주요 내용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안의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경조사비(5만원) 예외적 허용
 단,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 → 과태료 부과 대상 (수수금액의 2배~5배)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원칙적 금지!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줄 수 있는 경조사비·선물 상한액 조정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기존
10만원



변경
5만원
(화환, 조화 10만원)

경조사비를 내려 청렴의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선물
(금전,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제외)

기존
5만원



변경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음식물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

기존
3만원



3만원
(기존과 같음)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은 10만원까지 가능(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

주의하세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전처럼 일체의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를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 등은 불가!

예를 들어

- 인허가 신청인
- 지도·단속 대상자
- 입찰 상대방
- 인사·평가, 감사대상자
- 고소·고발인, 피의자 등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받는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그 외 선물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부조 목적으로 축의금·조의금과 화환·조화를 함께 주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금품등의 수수 금지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금품 등 수수금지 2

공직자 등의 배우자의 금품 수수행위에 대한 제재

제8조 제4항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
행위를 금지

제22조 제1항 제2호

배우자가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 등이 이를
알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 등을 제재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 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 표시한
경우는 제외



금품등의 수수 금지 양벌규정

-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

금품등의 수수 금지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 외부강의시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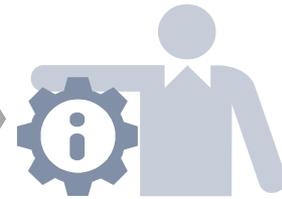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시 징계처분



직무관련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공직자 등 사례금 상한액
40만원 일원화

※ 각급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원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의무화
(신고보완기간 5일)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부강의 제한 가능

외부강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신고 및 반환조치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품등의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절차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신고·인도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반환·인도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요구**

+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조치사항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은 공직자 등

직무 참여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

CHAPTER

3

신고·처리
보상
징정

위반행위 신고·처리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모든 법은
법의 정신에 부합되도록
적용·집행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제정



법 집행과정에서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
의혹만으로 공직자 등이
조사를 받게 되면
선량한 공직자 등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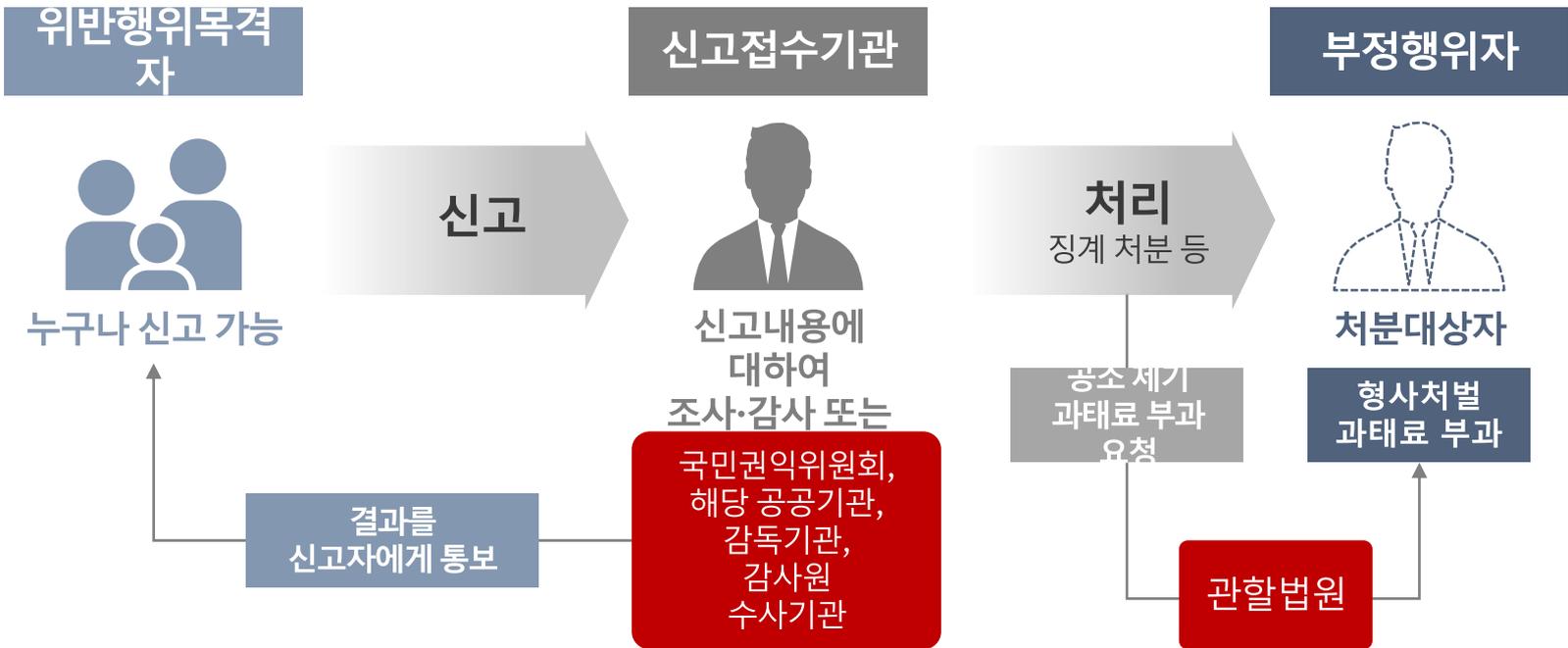
선량한 공직자 등의
권익침해 방지를 위한
방안이 필요



**신고 및 처리
절차의
투명성·정당성**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 허위신고 통제장치** (제13조 제2항에서 신고자가 이 법에 따른 보호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명시)

-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 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위배되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CHAPTER

4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금전적 보상



신고자

신고자 보호장치

- ✓ 신고자 비밀 보장
- ✓ 신고자 신변 보호
- ✓ 불이익조치 금지
- ✓ 원상회복조치
- ✓ 신고자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3조, 제14조3항~5항, 제16조~제25조 규정 준용

신고자 보상

- ✓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비용 절감
신고자의신청 →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 ✓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손실 방지, 공익 증진
포상금 지급가능 최대 2억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71조 규정 준용

“신고자·협조자에 대한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나 협조자의
동의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나 협조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공개** 또는
보도 금지



신고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공직자**
등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해야 하나,
조사·형사절차에서 신고자,
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
등이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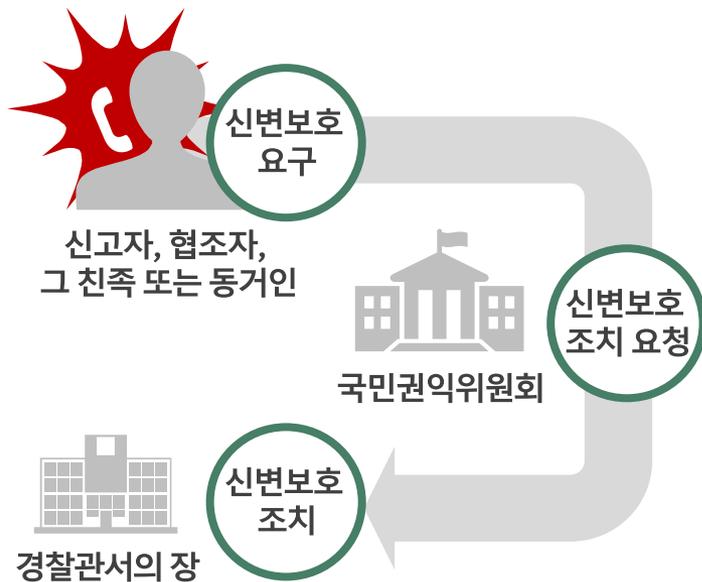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생명·신체의 중대한 위해 방지 요구”



신변보호요청



신변보호방법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시 동행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보호조치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신고자 및 협조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권익위에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처벌 :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처분

원상회복요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근무조건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 신고자 및 협조자는 권익위에 원상회복요구 등 보호

신청(불이익조치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내부신고자 특별보호조치

내부신고자가 신고 당시 청탁금지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실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권익위는 내부신고자를 보호하는 특별보호조치를 결정

이행강제금 부과

권익위의 보호조치결정을 통보받은 후 정해진 기한(30일 이내)까지 원상회복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보호조치 결정에 따라 **최고 2천만원**을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때까지 반복하여 **2년 동안** 부과)



책임감면

형벌·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면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거나 신고 또는 협조함으로써 자신의 법 위반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태료·징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음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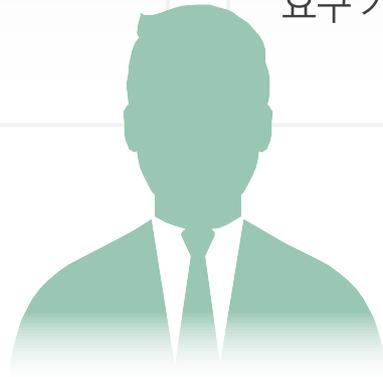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었다고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손해배상 청구 금지

피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자신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신고자 및 협조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발생 방지를 위해 인사권자에게 전직·전출·전입·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 요구 가능



신고자 보상·포상 제도

보상금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청탁금지법 제15조 제6항

보상대상가액의 4~3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고 30억원까지 지급**
신고로 인해 신고자가 받은 불이익처분 등에 대한 원상회복에 소요된 비용을 포함하여 보상금 산정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포상금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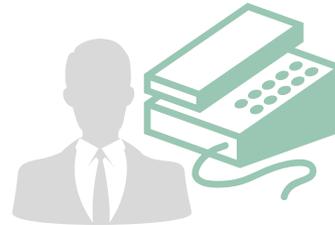
청탁금지법 제15조 제5항

최고 2억원까지 지급

부패방지권익위법 시행령 제71조 제2항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증대와 비용 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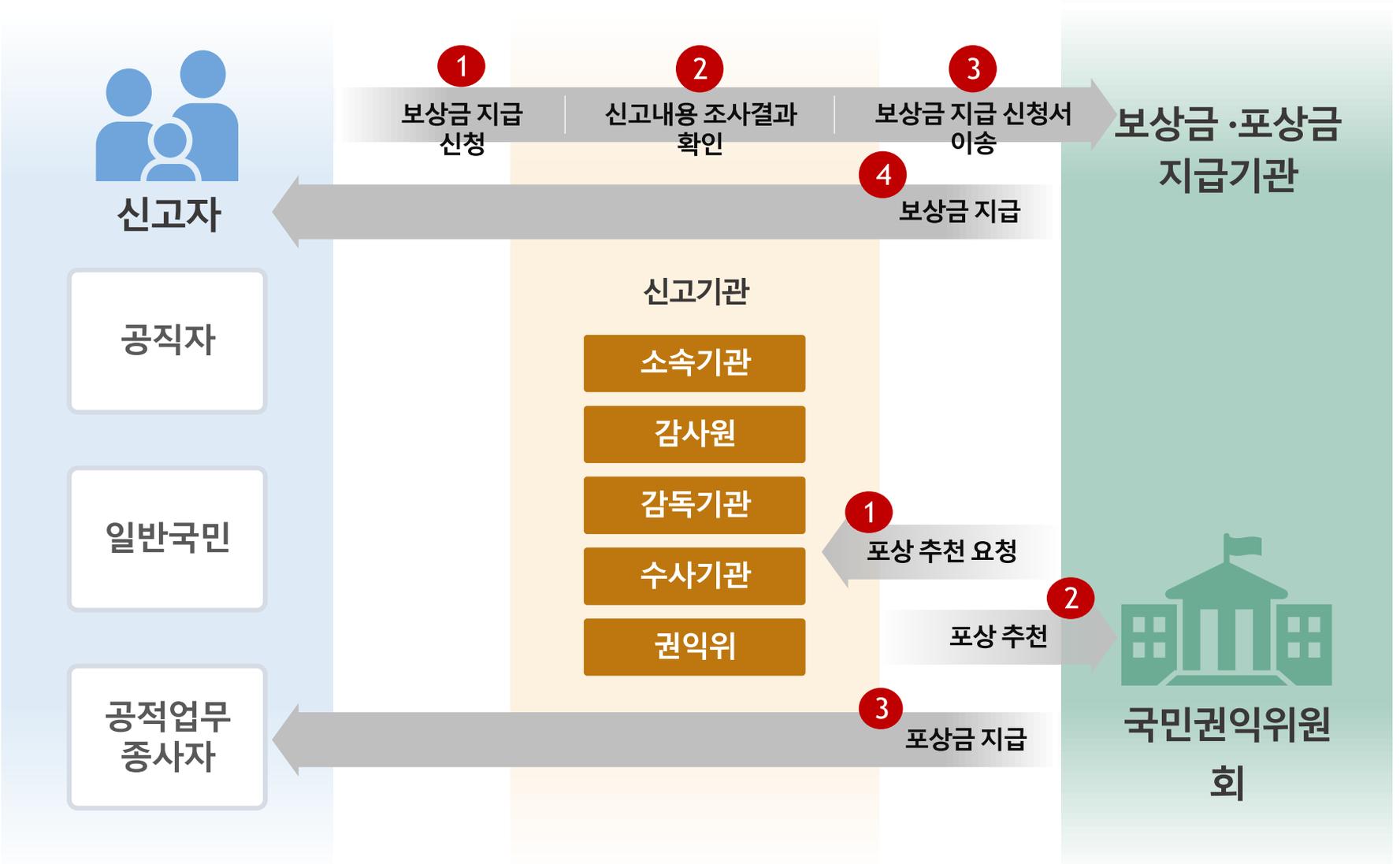


신고자의 손해를 보전
신고 활성화에 도움



부패예방 및
부패척결에 기여

보상금·포상금 지급체계도



CHAPTER
참고

주요 쟁점

청탁금지법 사례를 통한 주요 쟁점

-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1

이해당사자가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례

삼촌 잘 좀 부탁드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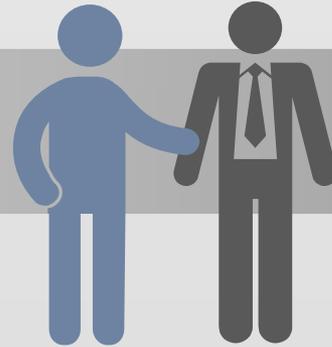
우리 조카의
면접점수를
높여서라도 채용을
검토 해주게!

알겠습니다.
걱정마세요!

심모국장 소속
부처
특채를 응시한
심모국장의 조카



공무원
심모국
장



인사과
강모
과장

**결국
채용에 합격**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2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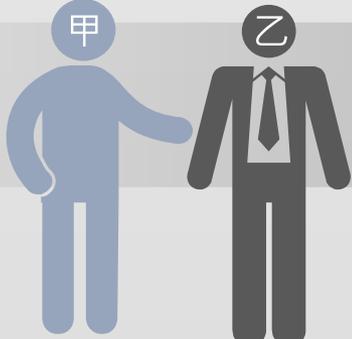


건축허가 좀
내주십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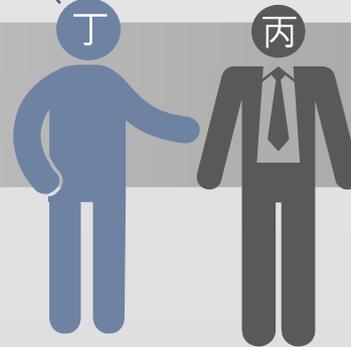
선생님도
아시다시피,
이곳은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곳입니다.

‘갑’이 낸
건축허가를
내주시게~

‘을’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한 ‘갑’



A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



중앙부처
건축정책과장
‘정’
A구청
건축과장
‘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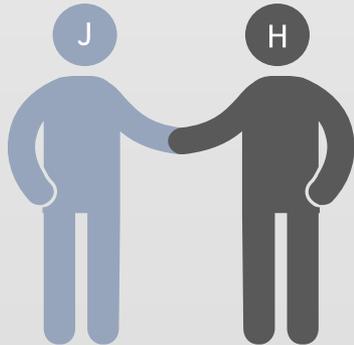
‘정’이 ‘병’에게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지시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3

공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난 행위 사례

저희 어머니 입원 좀
빨리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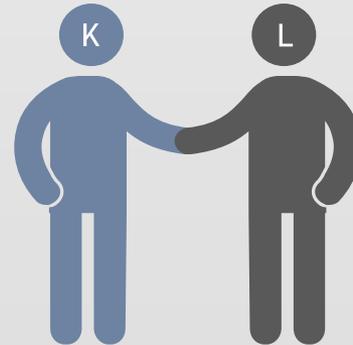
3개월이 걸리는
입원순서를
병원
관계자에게
부탁한 J씨



모
국립대학병원
원무과 H씨

주말 예약 순서 좀
변경해주시요.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의 예약
순서 변경을
청탁하는 행위



골프장
담당자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4
학교 성적 관련 청탁 사례

교수님. 과제제출한
것으로 처리해서 성적
올려주시면 안될까요?

학교성적을
조작하여
올려달라고
청탁한 학생



우리 애 성적좀
올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학생 부모가
자녀의 성적을
올려달라고
대학교수에게
청탁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5

오수처리시설 설치신고 수리 부정청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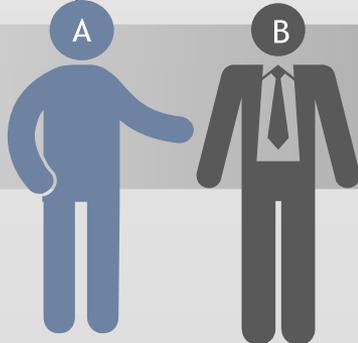


일반음식점 운영을
위해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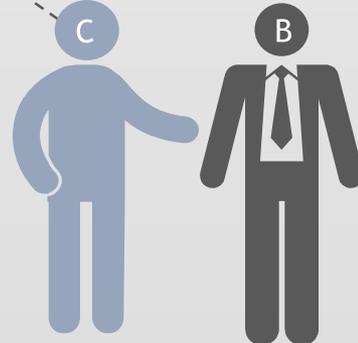
그 오수처리시설
설치 신고는 제 친한
친구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오수처리용량이
미달인데... 어떡하지?

하수도법령에
준하지 않은
오수처리시설 신고



00군청
담당공무원
B



00군청
공무원
C

**A는 공무원 C를 통해
B공무원이 자신의
설치신고를 수리해줄
것을 B에게 청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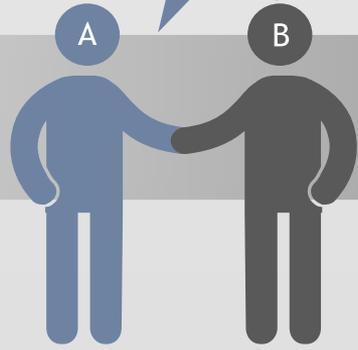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6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민원인A
OO구청
에
건물
증축
허가
신청



친구사
이 B

내가 신청한 허가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봐줘



OO구청
공무원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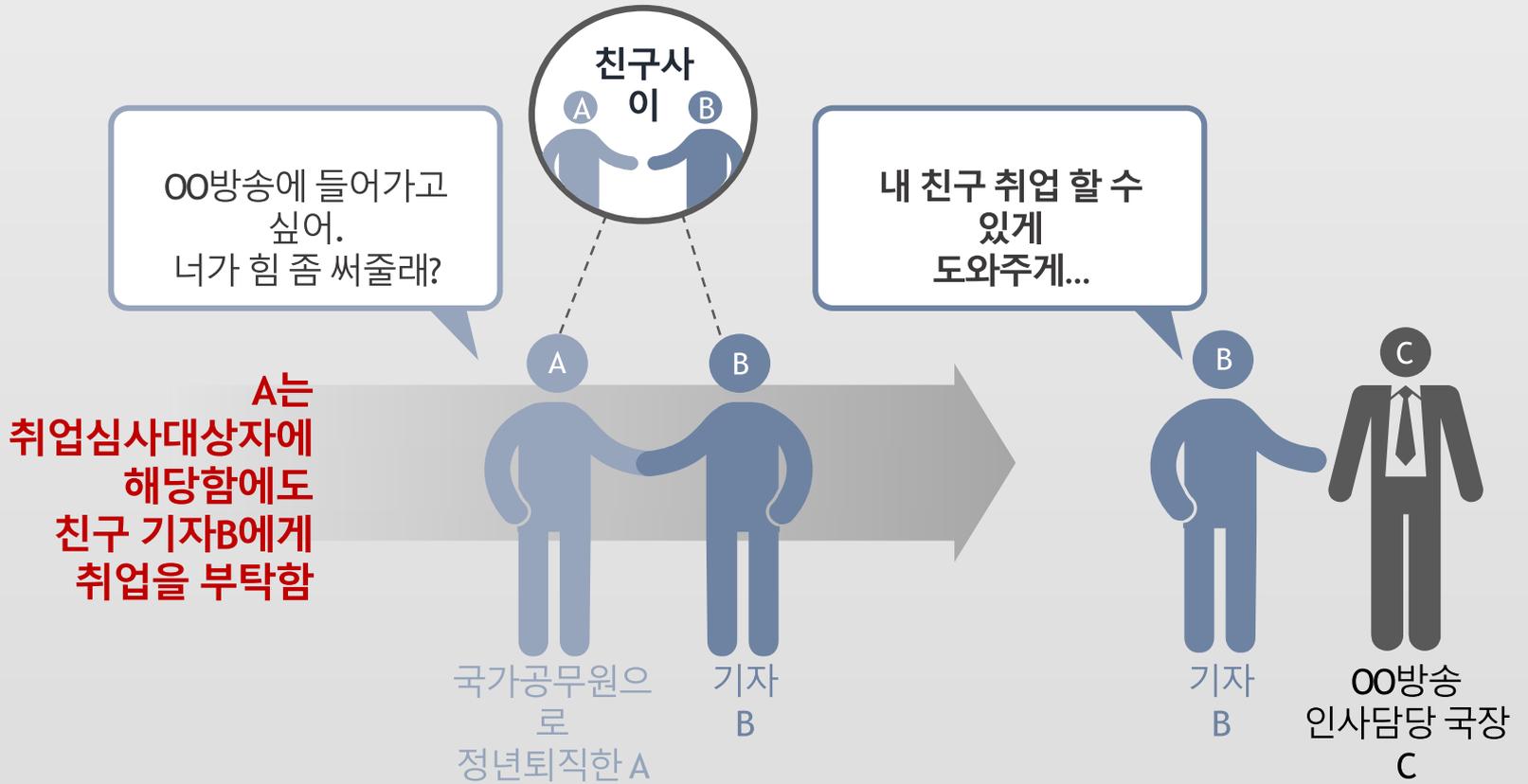
건축법령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해
불허가 통지

민원인A
증축허가를
내달라고 피켓팅
시위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7

언론사 취업 관련 부정청탁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8

법인 소속 임원의 부정청탁

건축법령상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허가를 내줄 것을 부탁한

A



甲건설(주)
소속 이사

A



00군청
담당공무원

C

건축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은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같은 회사 다른 직원이
다시 같은 내용으로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청탁

B



甲건설(주)
다른 직원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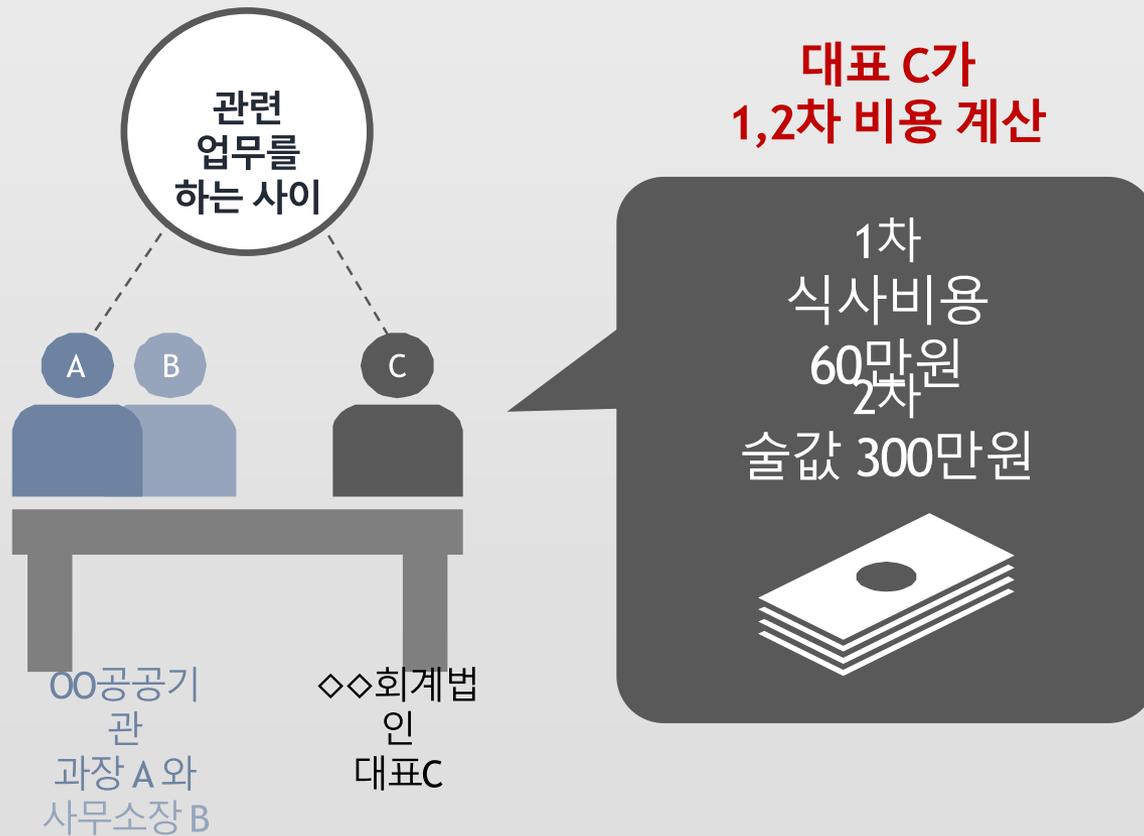


00군청
담당공무원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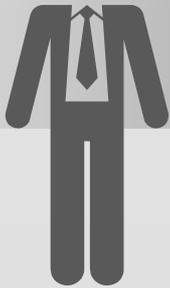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1

1회의 의미 관련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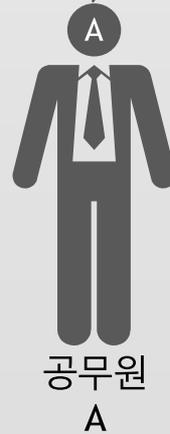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2 고객의 선물 사례

공무원 A
00지방자치단
체
지적과에서
10년간 근무



기존 업무와
관련이 없는
증양부처로
전출



공무원
A

평소
지적 관련 업무로
알고 지내던 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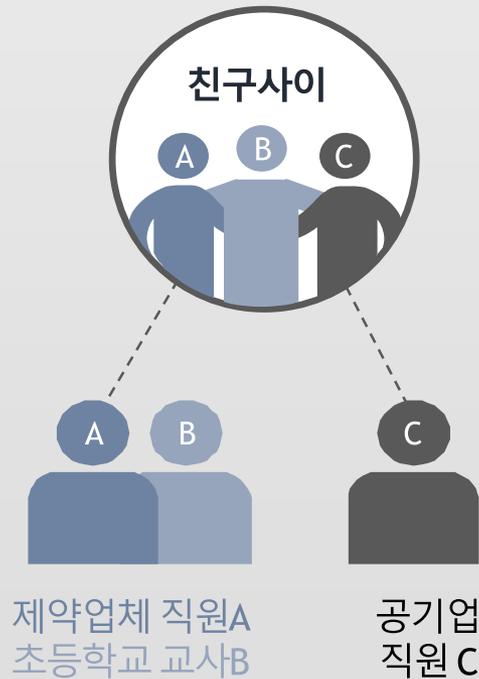
감정평가사
B

시가
15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선물로 줌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3

직무관련성 없는 금품

제약업체에 다니는
A가 식사값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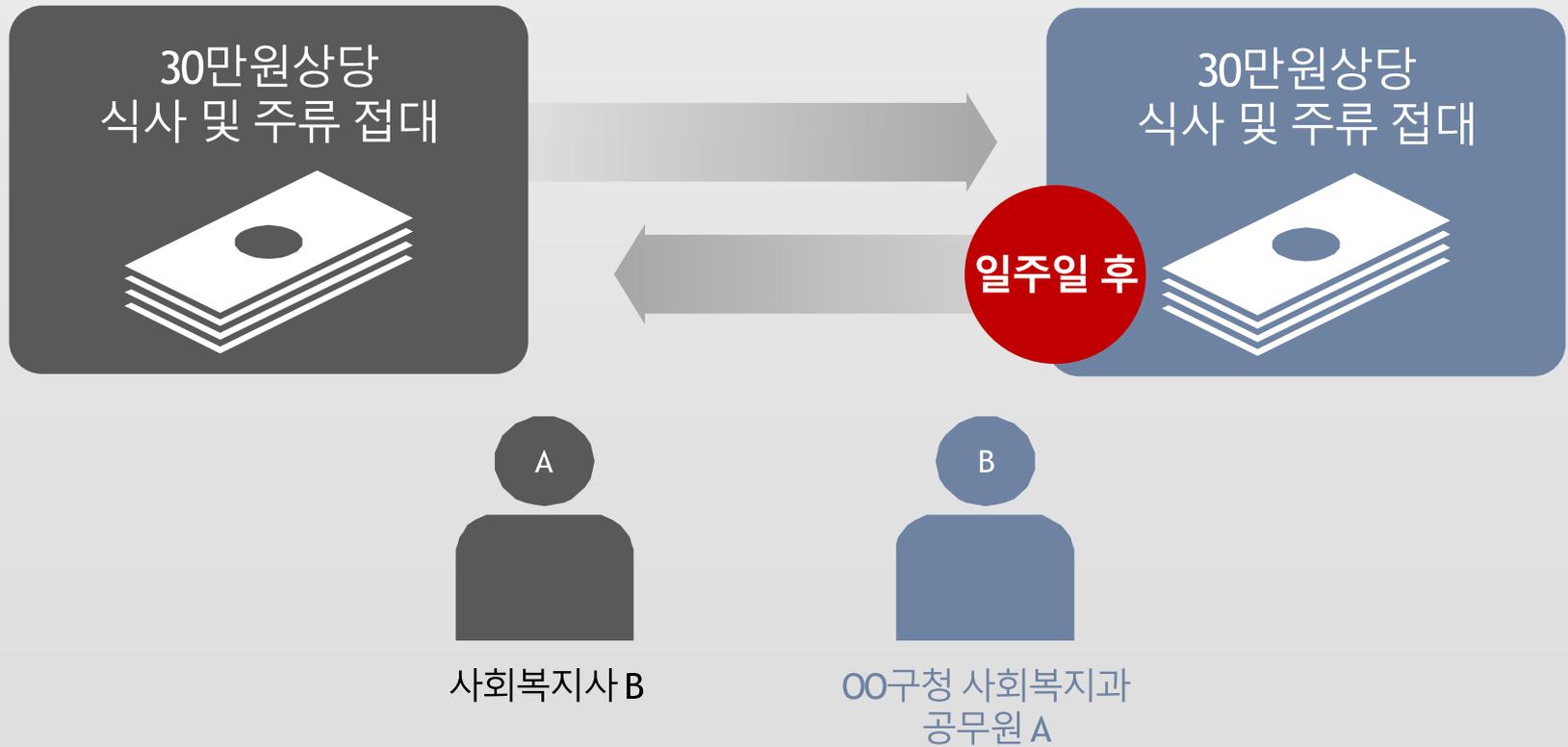


동창회 후
세명이 함께 한
저녁식사
식사비용
6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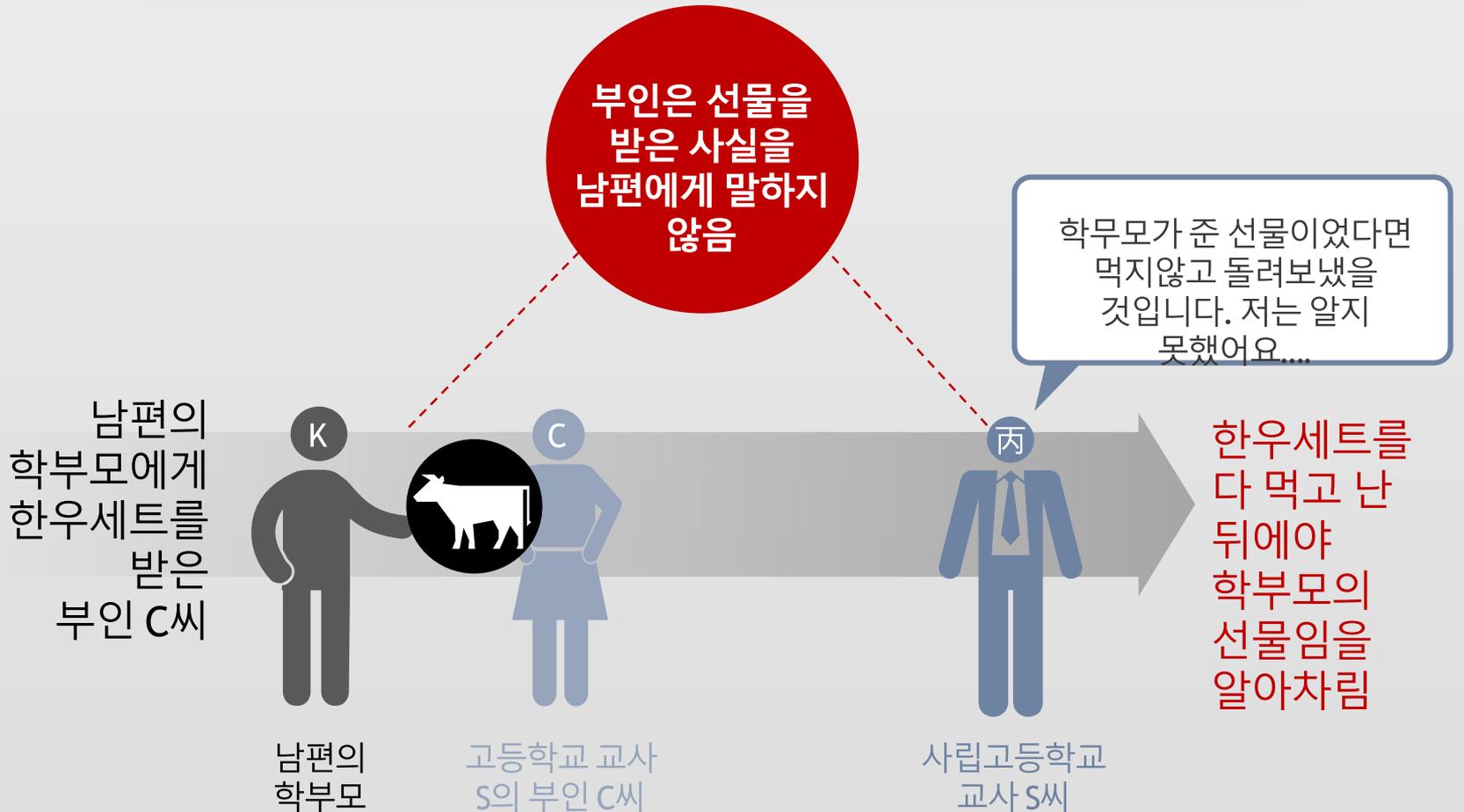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4

금품 반환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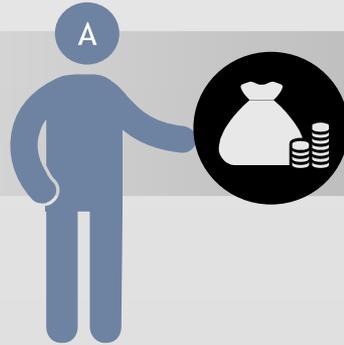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5 배우자의 금품수수 행위



금품등의 수수 금지 사례 6

사립학교 교사 금품 수수

우리아이 칭찬 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생활기록부도 좋은
말씀
많이 써주세요. 선생님!



학부모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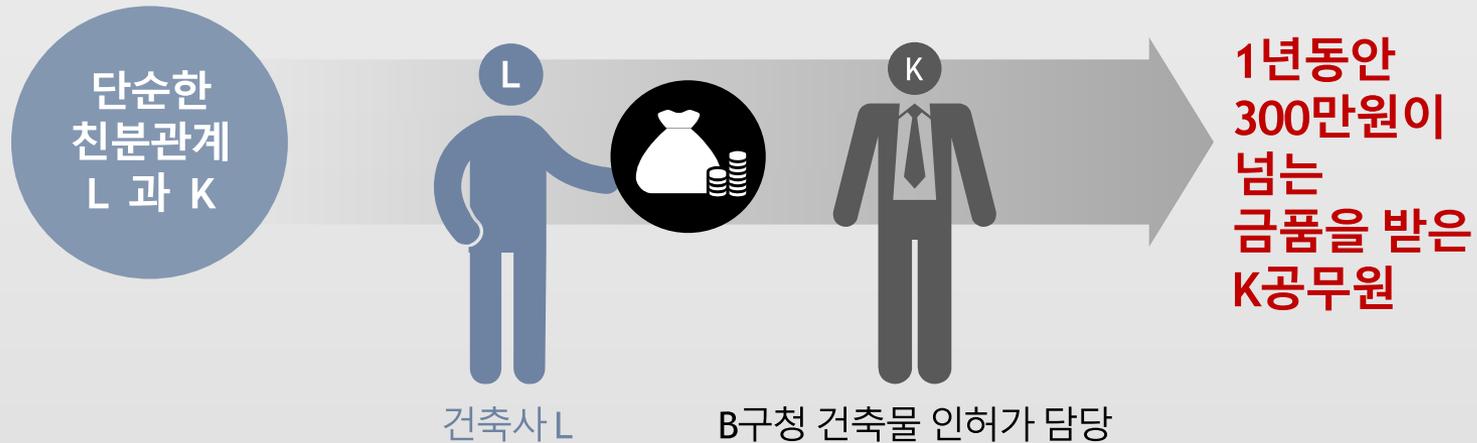
네.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사립초등학교
교사 A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음**

금지되는 금품 등 또는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등의 예외 사정과 관련한 사례



건축사 L은 K가 근무하는 구청 내에서 건축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었으며, 실제로 건축물 인허가에 편의를 봐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지도 않은 경우